

이산화탄소 심해 격리기술 개발

해양부, 수심 2000m 이상의 심해에 격리 ... 의무감축국 대비

해양수산부가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(CO₂)를 포집해 수심 2000m 이상의 심해에 격리·처리하는 기술개발에 착수한다.

2015년 실용화를 목표로 10년간 400억원을 투입하며, 대규모 CO₂ 발생원으로부터 분리·포집한 연간 1000만 톤의 CO₂를 수천년 이상 장기간 심해에 격리해 저장하는 신기술이다.

해양부는 우리나라의 CO₂ 발생량이 2002년을 기준으로 약 4억5000만톤에 달해 세계 9위, 과거 10년간 증가율은 세계 1위로 교토의정서 2차 이행기간인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.

이에 따라 해양부는 한국해양연구원, 한국지질자원연구원, 고려대 등 국내 주요 대학 및 연구소의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을 통해 CO₂를 심해에 격리·처리하는 기술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.

온실가스의 87% 이상을 차지하는 CO₂는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에너지에서 대부분 배출되는데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.6% 감축해야 한다.

<화학저널 2005/07/25>